

반려동물 6만마리 광주, 동물화장터는 1곳도 없다...왜?

3년 새 2만여마리 ↑ ...주민 반발에 번번이 무산
 불편 가중에 불법 매립·무단 투기 등도 잇따라
 ‘민선8기 공약’ 광주시 고심 “주민동의가 관건”

광주 지역 반려동물 수가 6만마리를 넘어섰지만 화장(火葬)이 가능한 동물 장묘시설은 한 곳도 없다.

민선 8기 광주시가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가운데 주민 반발에 번번이 무산된 동물 화장터가 이번엔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은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광주의 등록 반려동물 수는 ▲2019년 4만4421마리 ▲2020년 5만296마리 ▲2021년 6만4188마리로 꾸준히 늘었다. 불과 3년 새 2만여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반려동물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화장터를 갖춘 동물 장묘시설은 광주에 전무하다. 민간 운영 장묘시설이 1곳 있지만 장례·봉안 만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57곳, 전남에는 화장이 가능한 동물 장묘시설 2곳(여수·함평)이 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계획은 대부분 부지 확보·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인접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

충 부지 일대에 반려동물 화장터 설치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주민 합의가 무산됐다.

2018년에도 장례업체가 광산구 송학동에 동물 장묘시설(438㎡·2층 규모, 화장·장례·납골 포함)을 짓고자 했지만 주민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허가를 얻지 못했다.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다보니 광주 지역 반려동물 가구가 겪는 불편은 크다. 전남·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고 있다.

심지어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둘러싼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산에 묻거나 화장을 대행하는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 사체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동물 병원에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동물 사체 무단 매립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체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벌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도 동물 장묘시설 확충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으로 ‘반려 동물 복지

지원 시설 확충’을 내건 바 있어 이번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민간 업체가 시설 건립

의의를 했고 시 역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려동물 화장 시설 건립 부지 주

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복절 태극기 도심 행진 제77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

‘80년 만에 물폭탄’...보험사가 알려주는 자동차 ‘침수’ 피하는 법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이후 침수 등 위급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일단 침수된 차

‘침수된 차량’ 시동 켜는 건 금물
 “바로 공장 연락해 견인 조치해야”
 “물웅덩이 지난 후 브레이크 점검”
 “범퍼 높이 물길, 차 세우면 안 돼”

량의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량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로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면서 브레이

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도 저단 기어로 운행하는 걸 권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침수된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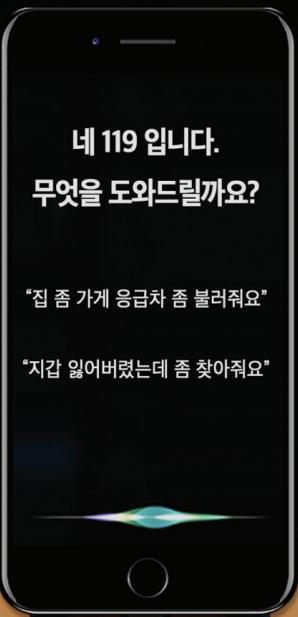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면 손해보험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내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범위 내에서다. 새로 산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과 함께 차량 등록을 마치면 된다. 뉴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